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북한학 연구의 접목에 대한 소고

권영태 |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수석연구원 | ilovetoron@hanmail.net

<논문요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¹⁾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1) 본고는 이러한 취지로 연구를 주선해 주신 한양여대 소셜혁신연구소 소장 안지훈 교수님의 배려로 시작되었다. 초고는 북한연구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주제어: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BOP, 적정기술, 사회적가치

I. 들어가며

‘10년 뒤 통일된다면 여성 인권은 나아질까?’ 2019년 8월 17일 『『여성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10년이라는 시간적 한정을 제외하더라도 과연 통일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 김정수)는 기사가 나기 며칠 전인 8월 9일 ‘2030년 통일 한국의 모습: 여성과 청년이 기대하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여성·평화 토크쇼를 열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통일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낙관할 수 없다며 “통일의 당위성이 부인된 적은 없으나 통일국가라는 공간에 공동화된 여성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낼 것이며 통일의 과정과 이후에 여성의 삶을 낭만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여성에게 재원이 공공재를 통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²⁾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2019년 본격적으로 ‘여성·평화·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다. 김정수 상임대표는 “한반도에 평화가 이뤄졌을 때 평화를 통해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성평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은 평화 안에서 여성은 ‘이등시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³⁾

여성계에서 본격화된 성평등한 한반도에 대한 구상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성인지 관점의 통일정책의 모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소 성급한 일반화의 우려는 있지만, 2019년 여성계의 성평등 한반도 구상은 지금까지 통일정책과 다른 분야들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로 보인다. 향후 제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2) 『여성신문』, 2019년 8월 17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62>, 검색일: 2019년 8월 19일).

3) 『여성신문』, 2019년 8월 18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374>, 검색일: 2019년 8월 19일).

장애인, 환경 등 다양한 분야들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사회적경제의 부상⁵⁾ 또한 사회적기업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의 설립⁶⁾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주요 이슈의 하나가 되어 왔다. 본문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통일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본고는 북한학 연구에 사회적경제의 부상을 접목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다. 아직까지 양자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 7월 16일 개최된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⁷⁾가 양자의 접목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학술적 성과로 보인다.⁸⁾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근대화 이론과 지속가능개발 담론과 구별되는 단번도약 전략을 주장하면서 사회적경제를 단번도약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자 단번도약이 지향하는 목적지라고 주장한다. 조 소장은 사회적경제를 사회시스템 및 제도의 혁신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제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혁신과 함께 단번도약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보고 있다.⁹⁾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사회시스템 및 제도의 혁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관련 현장과 학자들의 논의와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민간의 NGO 또는 NPO에서 전개한 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된 현상을 사회혁신으로 뭉뚱그려 볼 수 있으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혁신이 단번도약의 조건이라는 점은 쉽게 공감어 되나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경제가 단번도약의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단번도약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 예컨대, 현금 사회에서 신용카드 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자화폐 사회로 전환하는 - 을 설명하는

4) 개인적으로는 2018년 제4차 산업혁명과 통일정책의 접목에 대해 남북 체제 대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다. 공공부문통일교육전문 강사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교안을 작성했고, 통일교육에 활용 중인데, 개인 연구자의 차원에서 진행했고 공식으로 논문으로 발표도 하지 않아 필자가 처음으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긴 어렵다고 하겠다.

5)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는 이미 19세기부터 태동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1882년 상법에서 협동조합을 회사 형태의 하나로 규정했고, 1911년에는 민법에서 독자적인 법인격으로 포함되었다. 이미 이 당시에도 오늘날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출자 증권의 비거래성, 조합원 1인당 출자금 보유액의 한도 설정, 1인 1표 등의 특징을 갖는다(장종익 외,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서울: 동화, 2019, p.326).

6)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 처음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0년 12월 31일 설립됐다.

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코리아 단번도약 네트워크, cities 공동 주최, 주관. 이하 "단번도약 컨퍼런스."

8) 2019년 9월 6일 하루나누리 주최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남북 인도지원 및 도시협력 모델 탐색"이라는 주제의 2019 서울-평양 사회적경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9) 조정훈, 「단번도약, 사회적경제, 그리고 한반도」,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자료집(2019년 7월 16-17일), p.90.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예를 보면 사회혁신, 곧 사회시스템 및 제도의 혁신과 과연 필연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북한문제 또는 통일과의 연관성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본고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논의들이 북한학 연구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고찰하는 선에서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II. 사회적경제의 의미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최종적 합의 또는 통설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통합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어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안 경제로 이해하는 인식은 소개할 만하다. 이러한 인식은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와 맥이 닿는다.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그 본질상 신뢰, 상호호혜성, 연대 등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¹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부의 인증 및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정책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설정할 때 나타나는 진짜 문제점은 혁신성이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전혀 없는 정책, 공모전 사냥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진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각종 공모전에 그럴싸한 사업 아이디어만 제출하고 상금 사냥만 하는 대학생과 사회적기업가가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¹¹⁾

10) 김영배, 『마을민주주의 시대, 마을공화국』, 파주: 백산출판사, 2018, pp.30~32.

11) 이의현,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세상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김윤이 외, 『빅 픽처 2015』, 서울: 생각원, 2014, pp.100~101. 이의현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적경제의 모델 해저드에 대해 상반되는 긍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벤처 붐에 대비하여 이렇게 이해한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론지 마 투자와 지원이 이어졌고, 수많은 벤처 신화가 다시 쓰였으며, 솔한 사기꾼들이 그 열매를 가져갔다. 하지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으며, 그런 경험들이 양분이 되어 지금 한국 IT업계가 성숙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많은 미담이 만들어지고, 그만큼이나 많은 가짜 사회적기업도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공정하게 만들어보겠다는 비전을 가진 수많은 청년과 장년, 노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실패라는 쓰디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뿌린 씨앗은 다음 세대가 다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때,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다.'(같은 책, p.102).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사회적경제 주체이나, 영세하고 낙후된 경영으로 말미암아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라는 비판¹²⁾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제대로 광고나 홍보가 되지 않아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매출액이 꾸준히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조달은 사회적책임조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기존의 공공조달이 경쟁과 효율에 집중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등은 도외시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한 계약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 가격을 통한 구매가 아니라 최고 가치를 위한 구매를 장려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적책임조달이라는 것이다.¹³⁾

사회적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약 1,7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자금 수요가 약 1조 2천억원이라고 한다. 글로벌 임팩트투자자 네트워크 GIIN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산 규모는 약 2,280억달러(약 255조원)이다.¹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분분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적 뒷받침은 주로 생태거시경제학이라는 명칭으로 정립되고 있다. 영국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진행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팀 잭슨은 2003년 <변영 다시 정의하기>라는 보고서에서 ‘현대 정치경제학에서 최고의 원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게 하는 경제성장과 전혀 그렇지 못한 경제성장을 더욱 엄격히 구별할 것을 요구’했다.¹⁵⁾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과거 대체로 이러한 노동은 회비, 기부금, 국고보조금을 통해 대가가 지급되었다. 상당한 경우 자원봉사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울리히 벡은 의료, 복지, 보육 등 공공부문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를 과거의 일반적인 임금노동과 구별하여 시민노동이라고 명명했다.¹⁶⁾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12) 박철,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서울: 집문당, 2017, p.210.
 13)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마케팅」, 홍천: 아르케, 2015, p.26.
 14) 박기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시민투자」,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EXPO Social Venture Programbook』, 서울: 성동구, 2018, p.92.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경제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의미한다. 같은 곳.
 15) 팀 잭슨 지음, 전광철 옮김, 『성장 없는 변영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위한 생태거시경제학의 탄생』, 서울: 착한책가게, 2013, p.261.
 16) 김문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적 일문」, 서울: 휴머니스트, 2015, p.282.

성격 문제부터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적경제는 제3섹터로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같은 문제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영국 국가감사원과 재무성의 경우 제3섹터를 비정부 조직, 즉 주목적이 영리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적 조직, 원칙적으로 수익을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목표 추구에 재투자하는 조직으로 본다.¹⁷⁾ 이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이미 제3섹터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기업은 전통적으로 제2섹터로 분류되어 왔는데, 기업의 상당 부분이 제3섹터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계의 논점들을 모두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현장 및 학자에 따라 개념에 대한 논의부터 다양하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논지를 전개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경제활동 영역에 따른 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을 종합한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경제활동 영역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구분

생산부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소비부문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환부문	지역화폐, 아나바다운동단체 등
분배부문	자선모금단체, 재단, 마이크로크레딧기관 등

자료: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제75호, 2009.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마케팅』, p.41에서 재인용.

두루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로 묶이고 있지만, 모두 조직형태도 다르고 법적인 규율 및 정부의 소관부처도 모두 다르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김성기 외(2015)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은 기본적으로 상생과 호혜, 연대 등을 기본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 대내적·대외적으로 실현을 추구하는 가치의 유형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의 의미 또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처럼 아직 확립된 정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예컨대 KOICA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17) 주성수,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pp.2-3.

18)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마케팅』, 2015, p.58.

실천하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이 KOICA가 추구하는 핵심 미션이라고 한다.¹⁹⁾

사회적경제 현장 주체들과 학자들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출되어 있다. 많은 논의 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자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2016년 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에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고,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표징이다. 사회적 가치는 이미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실행해 온 정책들과 민간 NGO 또는 NPO 등에서 추구해 온 가치와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및 민간 NGO 또는 NPO 등의 활동과 구분되는 점은 기업적 방법을 통한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자들은 주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표현한다.

사회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또 다른 표징은 바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현장의 용례는 다양하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활용(성동

¹⁹⁾ 2019 SNU 사회공헌 Fair(2019. 4. 19. 서울대사회공헌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등 공동 주최) 자료집, p.14.

구),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기업가에 의해 설립(위키백과),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논점의 하나이다. SK그룹은 기업 차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2019년 8월 19일에는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와 공동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VBA(Value Balancing Alliance)를 설립했고, 2020년까지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국제표준을 만들 계획을 진행 중이다.²¹⁾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없는 용어의 사용, 사회적 부문 안에서의 공통 척도의 부족, 사회적 영향력, 결과물, 산출물, 비용에 대한 질적 데이터의 부족, 투명성에 대한 장려책의 부족, 의도하지 않은 결과, 부적당한 활용, 측정의 비용 등의 문제점이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²²⁾

여전히 학계에서도 용어 사용의 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는 엄밀한 개념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주체 여부를 임의로 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기업적 방법(경제적 가치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정리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II. 사회적경제와 통일정책

1. 사회적 가치와 통일국가의 미래상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살펴볼 때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실현할 가치의 내용과 관련된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통일에 따른 경제적 실리는 대략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²³⁾ 자원 혜택, 물류기지 혜택, 황해경제권 혜택, 관광 혜택, 코리아 리스크 해결 혜택,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혜택이 그것이다.

첫째, 자원의 혜택이다. 북한은 철과 석탄,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주요 지하자원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원 공동개발을 통해 북한의 낙후된 생산량을 어느 정도만

20) 안지훈, 「소셜벤처의 제도적 정착」,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19년 7월 24일), pp.16~19.

21)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2019. 9).

22) Melinda T. Tuan 지음, 조영복·류정란 옮김,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3, p.38.

23) 이하 통일에 따른 경제적 실리의 내용은 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2013, pp.67~80;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pp.51~62를 참고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며, 『통일교육 에센스』(서울: 정독, 2019)에 수록되었다.

향상시켜도 한국경제에 6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남한은 석탄·철광 등 지하자원을 연간 300억달러 넘게 해외에서 수입해 왔다.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북한이 향후 중동 산유국처럼 우리나라 생산기지가 되어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된다는 과장된 견해도 있다.

둘째, 물류기지 혜택이다. 부산항만 예로 든다. 부산은 현재 세계 5위의 무역항이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5천만명이 사는 대한민국의 항구도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통일은 철도와 도로를 부산항에서 중국, 러시아와 연결한다. 부산은 면적 5,50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40억명이 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세계 최대의 물류기지로 거듭나게 된다.

셋째, 황해경제권의 혜택이다. 오늘 중국은 G2라고 불리는 강대국이다. 중국 고속성장의 엔진은 동부 해안이다. 상하이, 광저우, 톈진, 다롄, 옌타이, 칭다오 등 해안 도시들은 모두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다. 마주보고 있는 신의주, 남포,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발전한다. 그렇지만 분단은 이를 가로막아 왔다. 통일은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지대인 동부해안의 발전 동력을 흡수한다.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대 경제지대를 만들게 된다.

넷째, 관광 혜택이다. 단적으로 통일은 강원도를 관광으로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 수 있다. 2010년 해외관광에 나선 중국인은 이미 5천만명을 넘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기 전이었던 2011년의 경우, 남한을 찾은 중국인은 200만명을 넘어섰다. 금강산과 강원도 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을 상상해 보라. 휴전선을 오가며 남북의 명소를 구경하는 식의 이벤트성 관광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금강산-설악산-강릉-평창 연계 관광 벨트가 실현된다.

다섯째,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 해결 혜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여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통일된 한국이 바이 코리아를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가 경제는 10년간 매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섯째,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혜택이다. 신창민(2012)은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예상한다. 통일 직후 남북간 소득격차 감축을 위하여 북측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대부분의 실물자본을 남측에서 생산, 공급함에 따라 남측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돌아온다.

신창민(2012)의 계산은 이렇다. 가까운 장래에 남측 경제 본래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개략적으로 3% 정도로 본다. 통일을 안 하는 경우 그렇다는 얘기다. 북측 자본재 조달을 위한 남측의 투자로 대략 5.6%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에 더하여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생산량 증가로 2.4%가 더해진다.

북측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성장은 당연히 더 커지게 된다. 여기에는 분단비용 감소로 인한 새로운 투자의 발생과 북측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은 고려하지도 않았다. 분단비용의 소멸로 인한 기회의 증대 또한 감안하지 않았다.

분단으로 인해 부담하는 유무형의 비용은 전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 70년 이상 분단 상태로 살아오면서 의식 속에 이미 내재화되어 당연하게 생각한다. 분단비용의 해소는 통일 이후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다. 통일비용에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²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일에 따른 경제적 실리에 대한 전망은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통일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저절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현 단계에서는 사회적 가치는 통일을 통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마인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중심적 과제로 부상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통일의 실현이 따로 놓게 될 것이 아니라 통일이 곧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 되도록 통일의 비전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구상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간한 교재, 통일교육원 자료를 보면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우리 정부가 상정하는 통일의 미래상

정치체제	대의제 민주주의
경제체제	시장경제 체제, 자유경제, 개방경제
사회체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체제
문화	인본주의로서 민족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는 문화
대외적	평화지향적이며 비핵평화국가

자료: 통일부, 『2012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들을 정치, 경제, 사회 체제와 문화, 대외관계 측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 가치의 내용이

24) 통일부, 『2012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p.165.

반영된다고 해서 그것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적경제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인지, 시장경제체제·자유경제·개방경제와 융합된 제3의 모델로 되어야 한다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말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천과 연구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대안노선의 모색 차원으로까지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장을 넘어서는 통일국가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는 엄밀한 철학적, 역사적, 경제학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시장경제 역시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상호부조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 조건임이 탈이념의 시대에 오히려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이기심과 경쟁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닌 공감과 상호부조에 기초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윤리적 부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²⁵⁾ 이러한 믿음에서 사회적경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일을 통해 각자의 존엄성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까지 격상된다.²⁶⁾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존의 시대와 공동체를 지향한다. 공존의 시대는 유한한 지구 생태계의 범위 내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또한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공동체는 국가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곳도 아니지만, 개개인이 시장의 불평등에 노출되어 시름하는 곳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유한한 지구의 생태계 범위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이루는 사회라고 한다.²⁷⁾ 표현은 아름답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지향의 극단은 19~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실패로 나타난 바 있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새롭게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배경이 되었다. 사회적경제의 지향이 과연 과거 사회주의적 지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규명되는 바에 따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얼마나 어떻게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규명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실리 이외에 통일의 무형적 혜택으로 언급되는 점 중에서 사회적경제의 부상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 중 통일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되는 부분은 인권 보호 정도다.

이종석(2013)은 통일의 무형적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분단의 개념을 다양하게 구분한다. 지리적 분단, 이념적 분단, 체제상의 분단, 정권 분단, 문화적 분단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지역적 분리로 시작하여, 이념, 체제, 문화, 감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원의

25) 정원오, 「청년일자리, 소셜벤처에서 답을 찾다」,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EXPO Social Venture Handbook』, 서울: 성동구, 2018, p.5.
26) 정원오, 「청년의 상상이 사회를 혁신합니다」, 『제1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EXPO Social Venture Handbook』, 서울: 성동구, 2017, pp.4~5.
27) 김성환,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서울: 타커스, 2014, p.36.

분열적 양상들이 중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른 무형의 분단비용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무형의 분단비용 극복은 또한 통일의 유형적 혜택이다. 이종석(2013)은 무엇보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는 분단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 구성원의 도덕성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해왔다는 점이다.

전자의 의미는 북한이라는 요소가 국내 정치 과정에 개입된 문제다. 남한 사회는 북한 문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지체되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다. 후자는 분단으로 인해 형제 간에 증오와 대결을 부추겨 오면서 민족 전체의 정신적 불구화를 초래한 현상을 의미한다.

이종석(2013)은 우리 민족이 절개와 주권이라는 도덕적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본다. 북한 문제로 인해 고유의 정의 관념을 파괴하고 자신의 이기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표변할 수 있는 기회주의 문화가 사회 저변에 양산되었다고 한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이러한 삶의 구속을 해소하는 의미가 된다. 이종석(2013)은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민족국가건설 프로젝트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단순히 혈연, 언어의 공통성을 넘어서 어떻게 단일한 공통의 내적 삶의 구조와 의식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라고 지적한다.²⁸⁾

통일을 통해 이종석(2013)에서 지적한 무형적 혜택을 거두게 되면 현재 사회적 가치에서 말하는 인권의 증진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아직 이 부분에서도 한계는 뚜렷하다. 인권의 증진이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권의 개념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나뉘어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권리만을 사회적 가치로 볼 수도 있게 되며, 인권의 세부 가치를 모두를 포괄해서 사회적 가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논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경제와 북한 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

도대체 북한, 통일 문제와 사회적경제는 무슨 관계인지를 논할 때 한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그러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백만장자이자 1975년 Maranatha Trust를 설립한 David Bussau의 사례이다. 부소는 마이크로크레딧 Opportunity International의 공동 설립자 겸

28) 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 pp.86~103. 이 부분도 『통일교육 에센스』(서울: 정독, 2019)에 수록되었다.

대표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사업, 직업훈련 및 창업프로그램을 실시해 2011년 기준 27개국 108만 고객, 125만건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평양에도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04년 북한 재무성과 협력하여 조선-마라나타 신용회사를 세웠고, 공장, 기업소, 개인 등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컨설팅 지원을 시작했다. 2006년 북한은 상업은행법을 제정했는데, 북한 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설립 운영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감안하면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은행의 허용을 의미하는 상업은행법의 제정은 놀랍다고 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증할 수는 없지만, 부소의 평양 내 사업, 곧 사회적경제 영역의 북한 지역에서의 활동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촉진하는 방향성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⁹⁾

과연 사회적경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먼저 해명되어야 할 문제는 과연 사회적경제가 북한 경제와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경제 뿐 아니라 사회주의경제 일반과 사회적경제를 비교하면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공공정책과 비슷한 차원에서 이해될 때가 많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행해야 하는 정책들을 예산의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 민간 차원에서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코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와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엄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김영희는 북한의 협동조합(수산협동, 생산협동, 편의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와 유사하다고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용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³⁰⁾ 향후에 구체적인 논증이 진행되기를 기다려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단변도약 컨퍼런스에서는 쿠바와 유고슬라비아, 중국의 전문가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적경제의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

29) 부소의 사례는 전병길·박일수, 『통일한국 브랜딩』, 서울: 꿈꾸는터, 2011에 소개된 내용을 재구성했다.
30) 김영희, 「왜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변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자료집 (2019년 7월 16-17일), p.106.

다.³¹⁾ 시장경제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체제 전환의 문제로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다. 해당 국가의 사회적경제의 경험과 가능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이미 해당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가 사회적경제와 유사하다는 무의식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세 전문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과연 해당 국가의 경제를 사회적경제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고슬라비아 전문가를 제외한 쿠바와 중국 전문가의 견해인데, 두 사람 모두 사회적경제와 비슷한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사회적경제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쿠바의 라파엘 케탕쿠르는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민중 연대경제(EPS)와 사회연대경제(SSE)라는 개념도 등장한다. 발표문의 내용이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다소 이해는 어려운데, 논자의 시각은 자본주의의 복원도 시장사회주의도 아닌 시장이 결합된 사회주의로서 정부부문이 강화된 사회연대경제를 쿠바 변화의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케탕쿠르의 견해를 이렇게 이해하면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연대경제, 즉 사회적경제는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 논자가 시장사회주의도 배척하면서 시장이 결합된 사회주의를 정부부문이 강화된 사회연대경제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 저우 리도 중국 농업의 발전과 전망을 다루면서 비슷한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리는 강한 사회란 세 개의 손을 가진 건강한 경제를 말한다고 한다. 세 개의 손은 시장 효과, 정부 기능, 사회적 힘을 의미한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리가 말하는 사회적 힘이 곧 케탕쿠르의 사회연대경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쿠바의 케탕쿠르도 중국의 리도 시장사회주의와 구분되는 사회적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발표이긴 하지만, 과연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개념인지는 아직까진 단정하기 어렵다.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북한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접목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유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다. 김영희는 평등을 지향하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도 이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²⁾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북한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접목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도 양극화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 내의 양극화 해결 과제의 방도로서의 측면이 북한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고려 요소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1) 라파엘 케탕쿠르 쿠바 하바나 대학교 교수, 소냐 노브코빅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32) 김영희, 「왜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p.106.

IV. 사회적경제와 통일 역량 강화

1. 남북경협기업에의 함의

2019년 9월 현재, 여전히 남북경협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은 다시 재개될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학계에서는 남북관계가 남북경협의 지그재그식 확대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7.7 선언에서 대북노선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되었다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단절되었다. 마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통일에 대한 희망이 반짝 타올랐다가 민주화 이후 대북노선이 전환되기까지 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지그재그란 표현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보수정권의 남북관계 단절과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은 완전히 중단되었지만, 다시 재개되는 경우 과거와는 새로운 차원에서 남북경협이 전개될 것이다.

우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기존의 남북경협은 교역 방식과 특구(개성공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역의 규모는 당연히 대폭 늘어날 것이고 특구도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구상처럼 북한 전역에 10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양적인 확대 외에 질적인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투자, 디자인, 품질관리, 브랜드, 기술이전, 광고, 마케팅 등 남북간의 경제협력 양상이 자본주의 경영과 마케팅의 첨단 방법들을 모두 적용하는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짐작건대 이런 상상은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맛이 훌륭하다고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북한 맥주의 용기 디자인을 남쪽 회사에서 진행한다. 남쪽에서 브랜드 컨설팅도 진행하고, 뉴욕 전광판에 우리 광고회사가 기획한 광고물이 걸린다. 더욱 질적인 측면을 예상해 보면 북한 지역 내에서 장기 상주하는 남측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유학생, 언론사 특파원도 생겨날 것이다. 반대로 남쪽에 와서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거나 사업을 하는 북한인도 있게 될 것이다.

향후 남북경협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될 때 사회적경제의 관점은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될까? 사회적경제 관점의 남북경협 접근은 우선 현재 남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남북경협에 직접 진출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접근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남쪽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남북경협 참여는 아직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지만, 고민은 시작되고 있다. 소셜혁신연구소는 서울시 소셜벤처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제20조에 시장이 소셜벤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소셜벤처의 해외진출과 남북경협 참여가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³³⁾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북한과 경협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일반 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여 경협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 기업이 사회적경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인드나 사업방식을 적극 고려하고 수용하여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향후의 남북경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만 한정될 가능성은 거의 예상하기 어렵다. 기존에 이미 일반기업들과 NGO들이 터를 닦아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일반기업과 NGO와 함께 보완적인 주체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를 예상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들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에서 활용하는 마인드나 사업방식을 적극 고려하고 수용하여 북한 진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이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북한과 경협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³⁴⁾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논리를 남북경협 사업에 적용해 보면 크게 3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저소득층이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북한은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개발 국가 비즈니스의 관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사회적경제 관점의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것은 저개발 국가 비즈니스의 관점이다.

저개발 국가 비즈니스 관점은 프라할라드 교수의 저소득층 시장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BOP 비즈니스, 곧 Bottom of Pyramid라는 개념도 사용된다. 프라할라드 교수는 저소득층 시장을 전 세계 40억명 정도로 추산한다. 북한 인구 2,500만명은 저소득층 시장에 포함된다. 저개발 국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팬틴과 샤크티 도이를 들 수 있다. 팬틴은 P&G의 최고급 샴푸인데 일회용 제품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다. 부유층은

33) 권영태, 「서울시 소셜벤처 조례안의 해석 및 함의」,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19년 7월 24일), pp.38-39. 소셜혁신연구소는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34) 이 부분은 전병길·박일수, 「통일한국 브랜드」, 서울: 꿈꾸는터, 2011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했다. 저자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필자는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차용하였다.

편리를 추구하므로 대용량을 선호하지만 빈곤층은 하루 일당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날 필요한 품목만 구매하고 일회용 포장을 선호한다는 발상이었다. 샤크티 도이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만-다논이 판매하는 요구르트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식품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가격을 낮추고 어린이 영양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 성분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우유로 제품을 만들어 고용 창출과 지역 개발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된다.

BOP 비즈니스를 실행할 때 같이 따라오는 키워드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다. 적정기술은 인간의 진보에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1973년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제안한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을 근원으로 한다. 슈마허는 대량생산기술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한다고 지적하면서 근대의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고 분산화를 유도하며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대중에 의한 생산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간기술이라고 명명했다.

적정기술 관점에서는 기술이 사용되는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 기구들과 조화를 이뤄야 적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이 이용 가능하며, 그 지역이 사람들에게 의해 그 도구와 과정들이 유지, 작동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 휴대용 정수 빨대)와 소켓 soccket: 축구공형 발전기)이 대표적인 적정기술의 사례이다. 라이프 스트로는 빨대 하나로 7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 99%의 수인성 박테리아와 98.5%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소켓은 하버드 공대 학생들이 2008년 개발한 발전기로 아이들이 15분 동안 차고 놀기만 하면 3시간 동안 LED를 밝힐 수 있는 양의 전력이 충전된다.³⁵⁾

남북경제협력력을 흔히 2,500만 새로운 시장을 넘어 대륙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평가한다. 사회적경제 관점의 접근은 북한에 맞는, 북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고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북한이 여전히 폐쇄적인 자립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북한에 대한 저개발 국가 비즈니스의 관점의 접근이 언제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북경협에서 북한을 자원(교역)과 노동력(특구)의 공급 차원에서만 고려했던 것과 달리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경협의 방향성으로 주목된다고 하겠다. 저개발 국가 비즈니스 관점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이를 구매 가능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35)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성장림(소셜벤처활동가 역량강화 과정) 교육 운영 설계를 위한 연구보고서』,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pp.29~31.

시장을 확대하는 선순환 고리를 창출한다는 발상이다. 북한을 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발상은 지금까지와의 남북경협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 기업의 진출보다는 북한 당국 차원의 거부감도 적을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2. 북한이탈주민정책에의 함의

사회적기업법은 제2조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³⁶⁾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2조 제6호에 북한이탈주민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규율하는 법은 다양하지만 사회적기업법은 가장 대표적인 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은 일정 정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본격화된 측면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법제도적으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사회적경제가 더 확장되면 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바라보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을 사고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그 위상을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의 주체로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경제의 시혜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자로 육성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만약 사회적경제와 북한의 협동조합이 유사성이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은 협동조합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³⁷⁾ 과연 북한이탈주민

36) 취약계층 범위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경쟁보호 대상자,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 범죄구조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가정폭력 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등이다.

37) 2019년 RISS, '북한이탈주민' & '협동조합' 검색 결과.

들의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에서 협동조합 방식과 친화성이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의 접목에 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창업보다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³⁸⁾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을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향후에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소셜혁신연구소³⁹⁾가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소셜혁신연구소는 총 9개월의 과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교육을 제안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사회적가치 확산 교육 -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가치 확산 교육은 상상 교실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의 주제로 나설 수 있게 한다.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은 도전 교실로 실제 창업에 나서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팀빌딩 방식이다. 연구소 소속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컨설팅하는데, 이미 특성화고, 전문대학, 이주민여성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의 실제 과정에서 성과를 거둔 방식이다.

〈표 3〉 소셜혁신연구소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교육 프로그램

월차	구분	과정	세부 내용
1		개강식	자기소개/사전조사
1	사회적 가치 확산 교육 (상상 교실)	사회적경제조직 이해하기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 가치 이해
2		사회적 가치 이해하기	
3/4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도전 교실)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사회적경제 교육, 팀빌딩, 창업기초교육, 창업사업모델구축
		창업기초교육	
		창업사업모델구축	
5/9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교육 (성장 교실)	창업 실무 교육	창업아이디어 공유 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서 작성 협동조합 창업하기
		협동조합 창업 실무	
9		수료식	교육평가 / 사후조사

자료: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내부자료.

소셜혁신연구소가 제시하는 교육 커리큘럼에 잘 나타나듯이 협동조합 방식을 중심으로 창업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협동조합 방식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보다 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38) 신용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자립방안에 관한 연구: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서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7 등이 있다.

39) 사회적경제 정책 전문가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가 창업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안 교수는 한양여대 내에 같은 명칭의 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탈주민들이 과거 북한 지역에서 경험한 협동조합 방식과 사회적경제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이 친화성이 있다면 그 효과성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에서는 최근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되고 있는 리빙랩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리빙랩은 기존의 주민참여사업에서 발전하여 모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각 분야를 나누어서 공공이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닌, 공공이 리빙랩 플랫폼이 되어 분야를 통합하고 전문가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⁴⁰⁾ 북한이탈주민정책도 사회적경제에서 적극 고려되고 있는 리빙랩 방식을 하나센터 등에서 도입하여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여타 지원정책의 실행에서도 활용해 볼만하다.

리빙랩 방식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경제 창립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공공 차원의 조직적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나노 퍼스널 브랜딩은 북한이탈주민 각각의 개인들을 내용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퍼스널 브랜드는 개인이 브랜드화되어 수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노 브랜드는 나노오션, 곧 소비자들의 초개인화된 작은 원츠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이를 브랜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초세분화된 시장에 최적화된 개별 브랜드를 의미한다.⁴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나노 퍼스널 브랜딩 역량 강화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이상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취약계층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도 없고, 사회적경제 창립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역량 강화 면에서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적경제의 부상은 통일교육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40) 「성동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 리빙랩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동구청 2019년도 연구용역보고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pp.1~181.

41) 김준모, 「작지만 강한 나노 브랜드」, 서울: 넥서스BIZ, 2015, pp.50~51, 217~218. 나노오션은 블루오션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발전의 전환을 통해 단순한 양적 경쟁 원리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특별하고 매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 즉 '블루오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시장의 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나노오션은 시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춘다. 블루오션이 새로운 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고객의 수요 창출을 강조한다면, 나노오션은 개별화된 고객의 '원츠'를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수요의 발견을 강조한다. 같은 책, pp.50~51.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폈기에 관련 내용이 당연히 통일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총론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통일정책의 콘텐츠를 마련해 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널리 확산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두 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우선 일반적인 통일교육이다.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 등에서 일반적인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남북경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 차원의 교육도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내용들은 관련 있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내용적인 측면과 별도로 통일교육의 주체 측면에서도 고려할 점이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담론으로 제출되고 있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부상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에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NGO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상충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한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NGO도 수익활동(기업적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체가 되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교류협력 NGO들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위상이 하락한 NGO와 사회적경제의 활력을 비교할 때 자칫 남북교류협력 시민운동의 사회적경제주체로의 대체 가능성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문제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NGO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NGO의 경륜과 노하우를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력과 결합하여 더 큰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는 평화와 통일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적 특수성으로 평화와 통일의 실현이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경제개발 계획은 수출대체 산업으로 시작하였다. 과연 그 시절 수출대체의 사회적 가치가 없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통일과 평화를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보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통일과 평화의 실현을 기업적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나야 한다.

사회적경제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자주 소개되는 마리몬드의 사례를 통일 문제에 적용한다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 마리몬드는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압화를 디자인 상품으로 만들어 성공을 거둔 소셜벤처이다. 길수를 비롯한 탈북 과정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북한 내에서 인권의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예술 작품이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마케팅과 영업 활동이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향후 우수한 창업가가 나와서 통일과 평화 영역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모범이 탄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통일강사로 양성하는 사업이 꽤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다수의 통일강사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독자적인 경영에 나선다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스스로를 홍보하고 영업과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진정으로 기업가적 마인드와 행동양식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창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3자(정부나 교회, NGO 등)가 추천하는 곳에 가서 강연하는 프리랜서 같은 활동과는 구분되는 기업가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국제개발협력의 SDG도 함께 그 연관성이 규명되면서 통일 문제에 접목되고, 통일교육의 콘텐츠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경제와 사회공헌활동, 국제개발협력의 SDG는 서로 다른 별개의 논리적 발전 궤적을 걸어왔다. 실행의 메커니즘에서도 다소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인 정부나 기업이나 NGO의 활동과는 모두 구분된다. 그렇지만 사회공헌활동이나 SDG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사회공헌은 주로 기업에서 사회적 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다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 발전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회공헌 활동은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자선적 기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자원봉사와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공유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기부 영역도 사회복지뿐 아니라 문화, 사회적기업 창업 등으로 확대되었다.⁴²⁾ 우리 사회에서 사회공헌은 이제 기업에서 다른 단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개념부터 기업의 사회 책임을 뜻하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기업’을 떼어 SC(Social Contribution)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2017년 서울대학교 사회공헌 교수협의회를 창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⁴³⁾ 기업의 사회공헌이 사회복지에서 문화, 사회적기업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사회공헌의 융합 흐름을

42) 정무성, 「사회공헌 추세와 대학의 과제」, 2019 SNU 사회공헌 Fair 자료집(2019년 4월 19일, 서울대사회공헌교수의회 등 주최), p.19.

43) 서울대 사회공헌 교수협의회는 대학 차원의 글로벌 사회공헌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2019년 4월 19일에는 2019 SNU 사회공헌 Fair를 개최하기도 했다.

잘 보여준다.

세계 3대 대학 평가 기관의 하나인 영국 THE는 대학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세계 대학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이 때 영향력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SDG를 수행하는 노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⁴⁴⁾ 사회공헌과 SDG의 융합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임팩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임팩트는 곧 번역하면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유엔 차원에서 제정한 SDG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에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종합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공헌, SDG의 본질적 공통점은 문제인 정부의 담론 중 하나인 포용국가론과 연결될 여지가 있다. 포용국가의 비전은 문제인 정부가 정부 담론으로 사용하면서 향후 임기가 만료되면 개념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국가의 방향성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은 달리 표현하면 전 한반도 차원의 포용국가 비전의 실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가 통일교육의 콘텐츠에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V. 나가며

사회적경제의 부상에 따른 북한학 연구의 시사점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 남북경협,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 5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관련 분야에서도 합의점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통일 문제와 함께 고려하여 체계적인 해답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예컨대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 통일 비전의 새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의 부상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또는 그래서 뭐? 이후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면 모두 향후의 연구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본고의 부족한 점이라고 하겠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향후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44) 정무성, 「사회공헌 추세와 대학의 과제」, p.19.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시론적 논의를 전개한 연구자로서 모든 답을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본고에 주목하고 취약계층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사회적경제조직 창립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나서기를 기대한다. 본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강사 협동조합 창업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북한에서 육성된 전문능력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에 적극 나서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 예컨대 음악 실기 교습의 경우 체제와는 상관없이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도 당연히 진행되어야겠지만, 북한·통일 연구자들, 사회적경제 연구자들과 현업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 IDI 방식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양자 간의 접목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의 서두는 여성과 통일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사회적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북한·통일과 접목하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음악교육의 경우 세계의 음악을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의 음악, 통일 이후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면 통일교육과 음악교육이 함께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급한 감은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사회공헌과 SDG의 본질적 공통성에 대해 주목한 점은 이번 연구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부한다. 내용적 만족도는 차치하더라도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여러 주제들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해 다른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Melinda T. Tuan 지음, 조영복·류정란 옮김,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3.
-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마케팅』, 홍천: 아르케, 2015.
- 김성환,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서울: 타커스, 2014.
- 김영배, 『마을민주주의 시대, 마을공화국』, 파주: 백산출판사, 2018.
- 김윤이 외, 『빅 픽처 2015』, 서울: 생각정원, 2014.
- 김윤탈,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학 입문』, 서울: 휴머니스트, 2015.
- 김준모, 『작지만 강한 나노 브랜드』, 서울: 넥서스BIZ, 2015.
- 박기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시민투자」,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EXPO Social Venture Programbook』, 서울: 성동구, 2018.
- 박철,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서울: 집문당, 2017.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제75호.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마케팅』, 홍천: 아르케, 2015.
- 신용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자립방안에 관한 연구: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서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7.
-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 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2013.
- 장종익 외,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서울: 동하, 2019.
- 전병길, 박일수, 『통일한국 브랜딩』, 서울: 꿈꾸는터, 2011.
- 주성수,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 통일부, 『2012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 팀 잭슨 지음, 전광철 옮김, 『성장 없는 변영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위한 생태계시경제학의 탄생』, 서울: 착한책가게, 2013.

(학술회의 자료집 및 연구용역보고서)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성장랩(소셜벤처활동가 역량강화 과정) 교육 운영 설계를 위한 연구보고서』,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성동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증장기 계획 수립 - 리빙랩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동구청 2019년도 연구용역보고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권영태, 「서울시 소셜벤처 조례안의 해석 및 함의」,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김영희, 「왜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자료집, 2019년 7월 16~17일.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2019. 9.).

안지훈, 「소셜벤처의 제도적 정착」,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조정훈, 「단번도약, 사회적경제, 그리고 한반도」,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자료집, 2019년 7월 16~17일.

(기타)

2019 SNU 사회공헌 Fair(2019. 4. 19. 서울대사회공헌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등 공동 주최) 자료집

『여성신문』, 「10년 뒤 통일된다면 여성 인권은 나아질까?」, 2019. 8. 17.

정무성, 「사회공헌 추세와 대학의 과제」, 2019 SNU 사회공헌 Fair 자료집, 2019년 4월 19일, 서울대사회공헌교수협의회 등 주최.

정원오, 「청년의 상상이 사회를 혁신합니다」, 『제1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EXPO Social Venture Handbook』, 서울: 성동구, 2017.

정원오, 「청년일자리, 소셜벤처에서 답을 찾다」,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EXPO Social Venture Handbook』, 서울: 성동구, 2018.